

“지역의무공동도급 민자·국책사업 확대 나설것”

 **인터뷰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계속되는 경기침체 수주물량 확대 통해 정면돌파
표준시장단체제 현실기준 반영해 공사 수익성 개선”

오인철 제21대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이 지난달 26일 공식 취임했다.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의 경기침체 극복 방안과 현안들에 대한 회장의 생각을 들어봤다.

- 도내 건설업계가 위기에 놓인 시점에 취임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역건설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 건설산업을 대표하는 건설협회 도회장직에 취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에 각오를 다집니다.”

-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 영향으로 수주물량이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수주양극화 현상과 함께 공공공사 발주물량 감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의 위기가 깊어 콘데요.

“동계올림픽 시설공사 대부분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대형공사이다 보니 실적규모나 재정상태가 취약한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은 입찰 참여마저 어려운 실

정입니다. 또한 SOC예산 축소 및 공사 규모 대형화 등으로 중소기업업체 공사물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수주 양극화 현상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향후 경기장 접근도로망 등 잔여 공사 사업 집행 시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여러분의 도움을 바라며,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봅니다.”

- 경기침체로 공사물량이 줄어 지역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주증가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요.

“공공공사 의존율이 높은 도내 건설산업의 특성상 물량 감소는 경영난으로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 물량 확대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활동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과 같은 지역업체 참여 제도를 민간자본사업이나 대형 국책사업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내년부터 시행이 본격화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지역업



체 참여 가점 마련 등 참여 대상 공사 확대를 위해 애쓰겠습니다.

이윤리 도내 발주기관들과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각종 사업 시행 시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고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등을 통해 도내 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건설기업들도 기술개발 및 연구에 투자를 확

대해 특화된 경쟁력을 갖춰 전략적 수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 3년간의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현안은요.

“우선 공사 수익성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에 힘쓸 것입니다. 실적공사비를 대신해 도입된 표준시장단체제의 현실기준 반영을 위한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종합건설업 영역을 침해하는 행동들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업계 권익을 옹호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회원을 우선하고 함께하는 협회를 위해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상호교류를 강화해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 끝으로 협회와 회원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3년간의 임기 동안 회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고 보다 발전하는 협회가 되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라며, 협회 발전을 위한 고견과 따뜻한 충고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허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3,400억대 올림픽 선수촌 시공사 선정 착수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 동계올림픽 선수촌으로 사용될 아파트 건설의 시공사 선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상 아파트는 강릉시 유전지구 A1블록 1공구(추정가액 472억원), A2블록 2공구(1,278억원), B1블록 3공구(422억원), B2블록 4공구(1,201억원) 등으로 총 3,37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아파트들은 대화가 끝난 후 유지보수를 거쳐 일반에게 분양될 계획이다.

원주~강릉 복선전철의 전기공사도 본격 시작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는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전철 전원, 전차 선로, 전력 설비 등을 구축하는 전기공사에 총 3,240억원을 들여 추진키로 했다. 현재 원주~강릉 복선전철 노반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궤도공사도 올해 상반기에 착수되는 등 전체 공정률이 42%에 이르고 있다. 공

단 강원본부도 이에 발맞춰 전기공사를 2017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허위윤기자 faw4939@

대형공사 진입 문턱 낮아진다

조달청 PQ 기준 완화... 지역업체 200억 이상 공사 컨소시엄 참여 확대

지역건설업체들이 2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조달청은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입찰 참여를 확대하고 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 7월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2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 및 대형사업에 적용되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는 입찰참가자의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

가해 자격을 부여한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의 무공동도급공사에 적용하는 등급별 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해 현재보다 80%의 실적만으로도 PQ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발주처에서 요구한 실적을 보유하지 못해 공동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지역 중소기업들이 이번 실적 완화로 공사 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로 지역건설업 수주 물량 증가 및 경쟁력 확보로 이어

지길 기대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적 기준이 완화됐다고 서울 및 수도권 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도내 업체들이 당장 대형사업에 참여해 크게 기여한다거나 수주 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효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며 “꾸준히 대형공사에 참여하면서 보유 기술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지역건설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완화로 대형공사에 보다 많은 지역업체 입찰참여가 가능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허위윤기자

‘철새업체’ 전기공사 지역의무도급 잠식

8개 공사 473억원 규모
입찰 앞두고 도내 이전
현재 8곳 중 3곳서 낙찰

속보= 강원도내 전기공사업체들이 동계올림픽 전기공사 입찰에서 철저히 배제(본지 6월30일자 1면)된 가운데 ‘철새 업체’ 때문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에서도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1일 강원도와 도내 전기공사 업체 등에 따르면 원주~강릉 복선전철 전력설비 공사 등 1183억원 규모의 8개 공사에 도내 전기공사 업체들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수주 가능 금액은 473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입찰을 앞두고 강원도로 주소

를 이전한 업체들 때문에 공동도급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시공실적과 경영상태가 양호해 단독수주 또는 외지 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 낙찰 확률이 높아져 도내 업체가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규모 전기공사 입찰을 앞두고 올해 상반기 도내로 주소를 이전한 타 지역 전기업체 수는 28곳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낙찰을 받지 못하자 다시 주소를 서울로 옮기는 등 ‘철새 업체’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낙찰받은 8곳의 업체 중 3곳은 올해 4월 주소를 강원도로 이전한 업체지만 지역업체로 분류되면서 지역

의무 공동도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100억원이 넘는 전기공사를 낙찰받은 A업체는 지난 4월 강원도로 전입한 업체지만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서울과 경기 등 타지역 업체들과 공동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머지 5개 업체 가운데 2곳은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철새 업체’로 분류하는 기준이 모호한데다 적절한 규제가 없어 도내 토종 전기공사 업체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강원도와 지역 건설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내 구체적인 지역 업체 보호방안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박성준 kwwin@kado.net

“원주~강릉철도 조속 완공해야”

국회 국토의 황영철 의원

국회법 개정안 파등으로 중단됐던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1일 정상화된 가운데 2018 평창올림픽의 필수 사회간접자본(SOC)인 원주-강릉 철도의 조속한 완공등이 논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영철(새누리당-홍천-횡성) 의원은 국토교통부 결산심사에서 원주-강릉 철도 사업과 관련, “지난해 예산 8000억원 중 1292억원이 불용됐으며, 총공정률은 40%에 불과해 동계올림픽 수송수요를 분담하는 사업의 공정률 중최하위”라며 “국토부는 올림픽 대회 전 점검도 필요한 만큼 조속히 공사를 앞당겨 마쳐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동열(새누리당-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교육부 결산심사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한 마디로 대도시, 대규모의 학교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빈익빈 부익부 정책”이라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농·산·어촌 공교육에 대한 복안이 없다면 이 정책을 원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권성동(강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업

무 가운데 일부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진민수 jimmins@kado.net



레고랜드 테마파크 진입교량 건설사업 기공식이 1일 춘천시 근화동 현지에서 열렸다. 서영

춘천 레고랜드 진입교량 첫 삽

2017년까지 896억 투입
도·춘천 상징교량 건설

춘천도심에서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연결하는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공사가 첫삽을 뒀다.

강원도는 1일 레고랜드 진입교량 종점부인 춘천시 근화동 북한강변 일원에서 레고랜드 진입교량 기공식을 개최했다.

레고랜드 진입교량은 오는 2017년까지 총사업비 896억원 투입해 연장 1058.5m, 폭 25m

규모로 건설된다. 건설공사는 서해대교와 이순신대교 등 특수교량부문 최고수준의 기술력과 시공실적을 보유한 대림에서 맡는다. 레고랜드 진입교량은 최신 공법을 적용해 강원도와 춘천 관광지의 상징성을 표현하는 경관교량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춘천시 중도동 하중도 일원 129만 1000㎡(약 390만평) 부지에 테마파크와 호텔, 워터파크 등의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외국인투자자인 영국의 멀

린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투자금 10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5011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레고랜드 진입교량은 춘천역이 위치한 근화동에서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들어설 하중도 관광지를 최단거리로 연결해 차량 및 관광객이 진입할 수 있는 편리한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며 “공기안에 진입교량 공사를 마치고도 하겠다”고 말했다.

백오인 105in@kado.net

새정치민주연합-건설협회 간담회

새정치 “간접비 미지급 개선책 모색”

건설협 “획일적 담합제재 개선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변경 근거를 명시하는데 건설업계와 의견을 같이했다.

또 중복·과잉처벌 논란을 빚고 있는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개선에도 공감을 표명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1일 국회에서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과 박수현 의원(정책조정위원장), 김우철 국토교통위 전문위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는 지난달 18일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과 진행한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최삼규 회장과 김동수 대림산업 대표이사,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최병수 한라 대표이사, 박종웅 삼일기업공사 대표이사, 이덕인 정일종합건설 대표이사, 이권수 고운건설 대표이사,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등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철회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개선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시기 연장(일몰기한을 2018년 말까지 연장) △과도한 하도급규제 강화 법안,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 신중처리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강 정책위의장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는 10억원까지 상향조정하는 게 고민할 부분이며, 간접비는 법에도 지급하도록 명시된 내용이 기획재정부 지침으로 이행되지 않는 건 문제”라며 개선책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교통세(에너지, 환경세) 폐지 연장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오른쪽)이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에게 건설업계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건설협회 제공

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획일·일률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도 이어졌다.

한 차례의 입찰담합 행위로 모든 공공공사의 입찰 참여를 차단하는 현행 규정을 ‘해당 발주기관’으로 제한하고,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등 다른 제재를 받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이다.

이미 처분이 이뤄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해제해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의견도 전달됐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건설업계의 위기를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입찰담합에 따른 (획일적) 처벌을 반복·악의적인 부분에 맞춰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사면은 별도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김우철 전문위원은 “입찰담합으로 100개 건설사 중 52개사가 (1조원 이상의 과징금, 입찰참가자격 제한, 형사처벌 등) 각종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해외건설시장 수주(진출)를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히, 향후 당 차원의 의견조율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밖에 임병용 GS건설 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실효성을 위해 초과이익환수, 공원용지 기부채납, 임대주택 비율 상향 조정, 각종 인허가 등을 지역실정에 맞춰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강 정책위의장은 공동으로 대안을 마련해 입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형용기자 je8day@